

2014년 6월 17일

박근혜 대통령  
110-820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전화: +82 (0)2 770 2372  
팩스: +82 (0)2 770 4732  
이메일: [paransong@president.go.kr](mailto:paransong@president.go.kr)

박근혜 대통령께,

제목: 밀양 시위자들에 대한 탄압 규탄과 송전탑 건설 중지

포럼아시아(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는 2014년 6월 11일 경상남도 밀양에서 일어난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 옹호자들과 밀양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탄압을 규탄합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의 마을 주민들이며 이들은 합법적으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고령의 시위자들에 대해 정부는 2,000명이 넘는 경찰병력을 동원 하였습니다. 포럼아시아는 이러한 대규모 병력 배치와 과도한 폭력 행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경찰은 강제로 주민들을 끌어내고 농성 천막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여 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이 부상을 입고 응급후송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밀양에서 일어난 강제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격렬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밀양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sup>1</sup> 대신 밀양시는 2014년 6월 2일 송전탑 건설을 재개하기 전 사람들에게 해산을 명령하고 천막 등의 시설물을 자진철거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포럼아시아는 밀양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와 실질적인 주민 참여의 보장 없이 금전적인 보상만 제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포럼아시아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인권 옹호자들과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제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규탄하는 바입니다. 또한 “업무 방해”나 “공무집행 방해”를 이유로 밀양 주민 및 활동가들을 계속해서 체포하는 것은 법률 체계와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보호 기제에 결점이 있음을 보여줄 뿐이며 당국에 대한 불신을 지속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2013년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방한 후 발표한 대한민국 공식 방문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sup>2</sup>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대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존중하며 보호하는 한편,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보장하고 그들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발언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sup>3</sup>

<sup>1</sup> [2013년 10월 10일 밀양 사건에 대한 포럼아시아 보도자료](#)

<sup>2</sup> [국가 보고서: 대한민국 방문 \(A/HRC/55/Add.1\), 2013년 12월 23일](#)

<sup>3</sup> [유엔 인권이사회 제 25차 세션 특별보고관과의 대화 시 대한민국 발언문](#)

따라서 우리는대한민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밀양의 모든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고 대화와 교섭을 시작해 국책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모든 의사 결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할 것.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위해 자유롭고 사전에 충분히 정보가 제공된 동의 (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 절차를 충족 시키고, 각종 국책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철저하게 위험요소 평가를 진행할 것.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것. 주민들의 불만 표출과 평화로운 시위를 최대한 용인하며 부당하고 독단적인 구속을 자제할 것.
3. 과잉 폭력의 사용을 삼가 할 것. 법집행공직자 행동 강령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법집행공직자의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 for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과 같은 국제 인권 수준과 군중 통제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경찰에게 제공하고 해당 역량을 강화할 것.
4. 권리를 침해한 자들이 제대로 책임을 지도록 할 것. 최근 폭력적 해산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보장할 것. 국가 공무원들과 그들의 수행 기관들이 면책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행위를 지양 할 것.
5. 옹호자들에 대한 범죄화와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과중한 벌금 부과를 금지하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률을 철저히 검토하여 국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것.



에블린 발라이스-세라노 (Evelyn Balais-Serrano) 포럼아시아 사무총장  
 전화: +66 (0)2 637 9126-7 팩스: +66 (0)2 637 9128  
 이메일: [asia@forum-asia.org](mailto:asia@forum-asia.org) 홈페이지: [www.forum-asia.org](http://www.forum-asia.org)

참조:

엄용수 현 밀양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당선자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팩스: +82 (0)55 359 5009  
 이메일: [sy2899@korea.kr](mailto:sy2899@korea.kr)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135-791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팩스: +82 (0)2 3456 4049  
 이메일: [ceo2@kepcoco.kr](mailto:ceo2@kepcoco.kr)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팩스: +82 (0)2 2125-9718  
이메일: [nhrc@humanrights.go.kr](mailto:nhrc@humanrights.go.kr)

이성한 경찰청장  
120-704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팩스: +82 (0)2 3150 3000